

필리핀 어학연수생 폭행 '진실공방'

학부모들 '상습구타' vs 법인측 '훈육 차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이 인솔교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어학연수를 주관한 도내 한 사단법인이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인 측은 "연수 과정에서 상습적인 구타나 폭행은 절대 없었고 어린 나이에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훈육 차원에서 몇 차례 쥐어박은 사실은 있다"며 학부모들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어학연수를 주관한 법인과 학생 및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 1월9일부터 2월5일까지 필리핀과 판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학생들을 모집했다.

법인은 방학을 맞아 연수를 미련했다며 홈페이지에 광고문을 게시했다. 연수 대상은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이중 필리핀으로 연수를 떠났던 28명의 학생들은 귀국 직후 "인솔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때렸다"며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학생들은 "인솔교사가 쓰레기통 주변이 더럽다는 이유로 가슴을 발로 차고 자신의 모자가 구겨졌으며 주위에 있었던 친구의 뺨을 때렸다"며 "교사에게 맞고 넘어진 아이를 발로 밟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학부모들이 귀국 후 실어증 증세를 보인 학생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 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법인 측은 학부모들의 고소 이후 전북경찰청을 찾아 "학부모들의 과장된 주장으로 법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법인 관계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이들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이 과장된 억측으로 억지도 않았던 사실을 언론에 호도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을 찾은 학부모들이 지난 1월부터 4주 간 전북의 한 사단법인에서 주관한 어학연수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솔교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인솔교사도 "연수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몇 차례 머리를 쥐어박은 사실은 있으나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습 폭행은 절대 없었다"며 "이를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아이들의 주장만으로 법인을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인솔교사도 "연수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몇 차례 머리를 쥐어박은 사실은 있으나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습 폭행은 절대 없었다"며 "이를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아이들의 주장만으로 법인을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지검, 지난해 하반기 평가 '6관왕'

자체 청렴도·4대 사회악 범죄 관련 대응 등 6개 분야서

전주지방검찰청은 2016년도 하반기 전국 검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자체 청렴도, 구급·보호시설 인권보호, 서민생활침해사법단속, 4대 사회악 범죄 관련 대응, 과학수사,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 등 6개 분야에서 우수성으로 뽑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실시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서도 우수청(2위)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청렴 풍토 조성 및 친절한 검찰상 구현, 인권보호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외부위원을 포함한 자체 청렴 TF팀 구성을 비롯해 단계별로 종합적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수용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과 법정사이 이동통로에 차단막 설치 등을 실시해 이 같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근 기자

또 정기적으로 이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에 지원하고, 휴가철 유원지 주변에서 미신고·무허가 영업 등 부정식품 판매 사범 18명을 단속해 2016년 4분기 4대 사회악 범죄 대응 우수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호중 전주지검장은 "상·하반기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각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검찰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사명에 충실한 검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근 기자

주차된 차량 타이어 흠친 3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타이어를 흠친혐의로 신모씨(37,남)를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께 남원 소재의 한 천변에 세워진 스포카 차량의 타이어 2개를 분리시키고 본인의 차량으로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흠친 타이어를 본인의 가족 소유의 동일 차종 차량에 끼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

청원경찰 발등 차량으로 밟은 60대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차량을 이용해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은 혐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모씨(6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북 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원경찰 A씨(51)가 차단봉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진행을 유도하자 그대로 A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난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청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확대'

전주시가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뿌리 뽑아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규모는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억 원으로,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개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

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각 구청별 사업예산(각각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 초과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 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수거보상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시-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수출증진 상호협력 협약

전주시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택)과 손을 맞잡고 전주 소재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시는 2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정원택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증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유망·선도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수출유망·선도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또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정보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관간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중소기업 해외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우수 중소기업 인증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규모는 작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강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과 글로벌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시,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사업 착수

전주시가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2017년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사업에 착수한다.

전주시는 22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원도심 12개동 동장과 사업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주거지 쇠퇴 등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오며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2개 동과 앞서 마을계획이 수립된 4개 동 중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할 2~3개 동을 각각 선정, 총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마을조사 등을

거쳐 추진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 꼭 맞는 마을의제가 도출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마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주민역량도 강화돼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사업대상동 모집공고에 앞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완산동과 인후2동에 대한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재까지 원도심 4개동에 대한 마을계획을 수립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총력'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학교 앞을 지나는 과속차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다수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어 도내 주요 학교앞에서 스쿨존 점검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2일부터 31일까지를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면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항상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